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관계자들이 22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입찰 공고 문제점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 “한수원, 300MW 수상태양광 입찰 중단을”

“사업 강행시 지역 상생 무력화 · 환경오염 유발”

태양광 구조재 ‘발포플라스틱’ 사용에도 특혜의혹 제기도

새만금 300MW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입찰과정에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전면 철회하고,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들이 최근 한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입찰에 대해 “지역상생을 무력화시키고 환경을 훼손하는 한수원 300MW 수상태양광 입찰을 전면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2월 29일 자회사인 새만금솔라파워(주)를 통해 새만금에 300MW급 수상태양광 입찰 공고를 냈으며, 지난 15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바 있다.

민간위원들은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한수원이 자회사인 새만금솔라파워를 내 세워 새만금 300MW 입찰의 제안

서 접수결과는 처참하다”며 “한화를 포함, 두 곳만 입찰에 참여했고, 그중 한 곳은 자격조건 여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입찰 참여를 오래동안 준비해 온 대형 건설사들이 모두 제안서 접수를 포기했다”며 “끼워맞추기식 입찰이 아니겠냐”며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민간위원들은 태양광 구조재인 발포플라스틱 사용에도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화는 수상태양광 시설의 구조재를 FRP 자재를 활용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부력체 또한 발포플라스틱이 사용될 것”이라며 “그동안 민간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대로 친환경적인 자재가 사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민간위원들은 또 “민관협의회 과정에서 지역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참여한 비율을 40%로 합의했음에도 총공사비 3400억 가운데 지역업체의 몫은 600억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18%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역업체의 의견이다”며 “이번 사업은 한수원과 대기업의 잔치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간위원들은 “한수원의 300MW 사업이 이대로 진행되면 새만금민관협의회가 어떻게 구축한 상생원칙과 합의정신이 무의미 할 뿐 아니라 지역에 도움이 안되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며 “한수원의 수상태양광 300MW사업의 공고를 전면철회하고, 새만금개발청과 건보도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 해야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30대 건설사 안전·보건관리자 60% ‘비정규직’

민주 윤준병 의원 “불안정 지위로 인한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 문제 개선책 필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30대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긴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30대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



준 30대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자 4,272명 중 정규직은 1,629명으로 38.1%에 불과했고 62%에 해당하는 2,64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재 관련 청문회 중인 건설업체 3곳을 보면, 현대건설(주)은 400명 중 128명이 정규직으로 32%에 그쳤고, GS건설(주)은 36.8%(329명 중 121명), (주)포스코건설은 39%(326명 중 127명)

에 불과했다.

30대 건설사 중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주)삼호로 전체 70명 중 10명(14.3%)만이 정규직 노동자였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주) 21.1%(175명 중 37명), 신세계건설(주) 21.4%(56명 중 12명), (주)한양 22.4%(49명 중 11명) 순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건설업은 산재 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인 만큼 안전과 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난해 30대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열악한 처우 및 근무 여건, 잦은 이직, 소속감 부족 등 불안정한 지위로 인한 구조적인 안전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 낙후, 정치권·행정의 책임”

민주 김수흥 의원, 전북도당-전북도 당정협의회서 비판

국회 기획재정부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 갑)이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전북의 낙후된 현실은 정치권과 행정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며 통렬하게 비판했다.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1년 제1회 전북도당-전북도 당정협의회가 전북의 2022년 예산 및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김수흥 의원은 “지금 전북의 현실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산업과 기업 유치 실패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성장 잠재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과 부산이나, 진주의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 실적을 비교한 결과 그 차이가 10배가 넘으며, 지역발전 투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30년간 전주와 새만금 위주의 개발전략이 전북을 17개 시도에서 최고로 낙후된 지역으로 만들었다”며 “이러한 실패는 전북정치권과 행정의 책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직접 경남도 김경수 지사를 만나 파악한 ‘부울경 메가 시티 전략’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북권 메가 시티 논의는 특별한 열매가 없는 껍데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업유치에 성공한 아산시의 변화, 진주시의 공공기관 유치 효과 및 시민의식 등 직접 발로 뛰

며 경험한 바를 조목조목 밝히며, 전북의 특별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전북이 극심한 낙후를 벗어나려면 전북 정치와 행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전북내 상생발전과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해 종전보다 100배 이상 노력해야 도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안겨드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산업배치에서 소외된 전북에서 40년 동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타지역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오죽하겠냐”라며 “탄소와 농생명 바이오 등 10년이 넘어도 아직 초기단계인 산업이지만 이것마저 놓아버릴 수는 없으므로 산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답했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 “전주시와 새만금 중심의 전북 발전전략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해 정치권의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것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의료법 개정안 두고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

이용호 의원, 의사협회 비판... “오히려 의사 명예 향상에 기여”

의사협회가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2일 성명을 내고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식의 가짜 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작년 공공의대를 둘러싸고도 가짜

뉴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어 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주장은 혼란만 부추길 뿐 설득력이 없고, 국민의 신뢰감만 무너뜨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이 상실되는데, 전문직 종사자라면 그만큼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기대와 믿음이 커지고, 사회적 역할 또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절대다수의 의사는 선량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우려와는 달리 의사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무리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방역을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민생당 전북도당 ‘새만금 해수유통이 답이다’ 김경민(왼쪽) 민생당 전북도당 도당위원장과 조형철 민생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이 22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민주 이원택 의원, 힌다리새우 스마트 시설 건립 추진에 ‘큰 공’



전북도내 내수면 양식 품종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품종 개발로 고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힌다리새우 스마트 실증연구 시설’이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70억원 규모로 건립이 추진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기까지는 국회 농해수위원회 이원택 의원의 역할이 컸다.

이 의원은 전북도 관계자들과 함께 ‘전북 힌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연구 시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상 기자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